

2022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결과 보고서

2022. 0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목 차

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소개	3
1. 2022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요	4
2. 준비 과정	5
1) 프로그램위원회	5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6
3) 사무국	9
3. 프로그램	13
4. 행사 평가	15
1) 참석자 통계	15
2)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16
5. 결산	17
6. 사진	18
7. 워크숍 세션별 결과보고서	20

별첨 1.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 국가를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 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22년에 11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 하였으며, 세계 IGF에 국가인터넷거버넌스포럼(National IGF)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세계 IGF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KrIGF 사무국 (Tel. 02-3446-5934, E-mail. krigf@kiga.or.kr)

1. 2022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요

- 주 제 : 사람중심 인터넷,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 일 시 : 2022년 7월 15일(금), 09:40~17:50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B1), 교육실1,2(2F), Youtube 생중계
-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비아, 미래인터넷포럼(FIF), 사이버커먼스, 오픈넷,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과 입법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카카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총 11개 기관)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비아, 오픈넷, 카카오(총 4개 기관)
- 홈페이지 : www.krifg.kr
- 참석인원 : 총 330명 (참석자 172명(53%), 유튜브 시청 158명(47%))
 - * 참석자에 각 워크숍 세션 패널 포함
 - * 유튜브 시청은 로그인하여 시청한 인원만 카운팅 하였으며, 각 세션마다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음
- 주요결과
 - (프로그램) '사람중심 인터넷,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사람 트랙에서 8개 워크숍 세션 및 2개 강의 세션 진행
 - 포럼 사전홍보 및 KISA 내 인터넷거버넌스 역량강화 목적의 교육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도모하여, 청년주도의 다수의 세션 진행
 - 문자 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KrIGF 접근성 보장
 - 행사 전후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유튜브 채널 도메인 활성화(krifg-channel.kr)를 통한 행사 당일 생중계 및 동영상의 아카이브 등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의 영상 체계화

2. 준비 과정

1) 프로그램위원회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김경석(위원장), 부산대학교, 기술계
 - 전용준(위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시민사회
 - 김성환, 카카오, 산업계
 - 김태희,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계
 - 박복남, 드림이즈, 산업계
 - 이종현, 아시아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VPN), 산업계
 - 조부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계
 - 장시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부
 - 최현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부
 - 서창호, 공주대학교, 학계
 -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학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최은창, MIT테크놀로지리뷰, 시민사회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 2022년에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고 행사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21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회의 (제60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2022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신청현황 확인 및 위원회 구성
 - NRI 회의내용 관련 보고서 확인 및 향후 NRI 활동 방안 토의
 - KrIGF 2019, 2020, 2021 영문 보고서 발송 확인
 - KrIGF 프로그램위원회 2022년 활동 계획 검토
- 2월 25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2차 회의 (제61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2022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기존 NRI 코디네이터 활동여부 공유 및 향후 활동방안 논의
 - 2022년 KrIGF 장소 및 일시, 주제 및 프로그램 내용 논의
- 3월 25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제62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NRI mailing list 내용 보고
 - 2022년 KrIGF 개최장소 조사내용 공유
 - 2022년 KrIGF 프로그램 워크숍 세션 공모 포스터 검토
 - 2022년 KrIGF 주제 및 슬로건 논의(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참고)

- 4월 29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4차 회의 (제63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NRI mailing list 내용 보고 (KrIGF62-2)
 - NRI mailing list 내용 보고 (KrIGF63-3)
 - KrIGF 문서 번호 관리에 관한 제안 (KrIGF63-4)
 - 2022년 KrIGF 개최장소 예약현황 공유 (KrIGF63-5)
 - 2022년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사 모집 논의 (KrIGF63-6)
 - 2022년 KrIGF 서포터즈 모집 논의 (KrIGF63-7)
 - 2022년 KrIGF 워크숍 세션 모집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KrIGF63-8)
 - 2022년 KrIGF 주제 및 슬로건 논의(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참고) (KrIGF63-9)
- 3월 30일 ~ 05월 18일 : 2022 KrIGF 워크숍 세션 공모 기간
- 5월 16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온라인 회의 (제63차 추가 회의)
 - 2022년 KrIGF 워크숍 세션 모집현황 공유 및 논의 (KrIGF63-8)
 - 2022년 KrIGF 주제 및 슬로건 온라인 투표 결과 공유
- 5월 27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5차 회의 (제64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KrIGF63-2a, KrIGF63-12)
 - NRI mailing list 내용 보고 (KrIGF64-3)
 - 2022년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 참여기관 중간점검 (KrIGF64-4)
 - 2022년 KrIGF 서포터즈 모집경과 보고 (KrIGF64-5)
 - 2022년 KrIGF 워크숍 세션 모집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KrIGF63-8b 및 KrIGF64-6)
 - 향후일정 점검(KrIGF61-4)

- 5월 2일 ~ 5월 23일 : 2022 KrIGF 서포터즈 모집기간
- 6월 10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2차 온라인 회의 (제64차 추가 회의)
 - 업데이트 된 워크숍 세션 제안서 검토 및 프로그램 논의
- 6월 21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3차 온라인 회의 (제64차 추가 회의)
 - 의제 (안건) 채택
 - 2022 KrIGF 워크숍 세션 제안서 패널 업데이트 현황 확인(KrIGF63-8h)
 - 2022 KrIGF 홍보 웹자보 검토
 - 2022 KrIGF 타임테이블 검토
- 6월 24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6차 회의 (제65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
 - 지난 회의록 검토 (KrIGF64-2a, KrIGF64-12, KrIGF64-22)
 - NRI mailing list 내용 보고 (KrIGF65-3)
 - 2022년 KrIGF 워크숍 세션 제안서 업데이트 취합본 공유 (KrIGF63-8i)
 - 2022년 KrIGF 개최식 및 프로그램 타임테이블 논의 (KrIGF64-6d)
 - KIGA 관련 도메인 조사내용 공유 및 논의 (KrIGF65-4)
 - 2022 KrIGF 개최(7.15) 전 행사 점검 회의 필요성 검토
 - 차기 회의 일정 검토

- 7월 6일 : 2022년 프로그램위원회 4차 온라인 회의 (최종점검 회의)
 - 의제(안건) 채택
 - 2022 KrIGF 예산 점검 (문자통역 서비스 견적 공유 포함) (KrIGF65-14)
 - 2022 KrIGF 개회사 및 축사 점검(64-6h)
 - 2022 KrIGF 워크숍 세션별 패널 점검(64-6h)
 - 기타 필요 사항 점검
- 7월 15일 : 2022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 8월 26일 : 2022 프로그램위원회 7차 회의 (제66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
 - NRI mailing list 내용 보고
 - 2022 KrIGF 개최 결과 보고 및 평가
 - 2022 KrIGF 워크숍 세션 결과보고서 검토
 - 2022 KrIGF 프로그램 위원회 활동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차기 KrIGF 프로그램 위원 구성관련 기타 논의사항

3) 사무국

○ 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정길원, KOICS
- 박은하, KOICS
- 김학진, KOICS
- 박정하, KOICS
- 서 윤, KOICS
- 황윤정, KOICS
- 송석빈, KOICS
- 조호인, KOICS
- 설예슬, KOICS
- 오채혁, KOICS

○ (서포터즈)

- 김지율, 한밭대학교
- 문필섭, 서울시립대학교
- 손정우, 리츠메이칸대학교
- 정예원, 하얼빈공업대학교
- 조현주, 이화여자대학교
- 이신희, 단국대학교
- 유재원, 알리치경영컨설팅
- 노우석, 광주대학교
- 유상민, 통계개발원

- 박상윤, 한국공학대학교
- 김기영, 이화여자대학교
- 채진주, 조선대학교
- 김소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심영경, 동아보건대학교

4) 페이스북 페이지

- 기존에 페이스북 그룹이 존재하였으나 개인 계정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KrIGF의 공식 계정을 통한 조직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음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rigf.kr/>

5) 유튜브 채널 개설 및 KrIGF 동영상의 체계적인 관리

- 과거에 촬영되었던 영상을 포함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도메인 개설.
- 유튜브 채널 : krigf-channel.kr

6) 문자통역

-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속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로 함.
- 사회적 협동조합 에이유디(<http://www.sharetyping.com/>)의 문자통역 서비스 이용.

3. 프로그램

- ‘사람중심 인터넷,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사람 트랙에서 8개 워크숍 세션 및 2개 강의 세션 진행

트랙1	트랙2	트랙3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사람

시간	내용		
	개회식		
09:40 ~10:20	<input type="checkbox"/> 사회 : 전응준(KrIGF/공동위원장,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input type="checkbox"/> 인사말 : 이동만(KIGA/위원장, KAIST/교수) <input type="checkbox"/> 축사 : - 과기정통부(영상)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input type="checkbox"/> 개회사 학계 - 김경석(KrIGF/공동위원장, 부산대/명예교수) (영상) 시민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공공계 - 이원태(KISA/원장) 기술계 - 조부승(KISTI/센터장)	
	1.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바란다	2. 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3.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10:30 ~12:00 (90')	<input type="checkbox"/> 사회 : 박지환(오픈넷/변호사) <input type="checkbox"/> 토론 패널1. 박정섭(KISA/인터넷주소센터장) 패널2. 김상민(가비아/차장) 패널3.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패널4.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교수) 패널5. 이동만(KAIST/교수, KIGA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사회 : 이재영(동국대/VoY@IG) <input type="checkbox"/> 발제 및 토론 - 박성준(동국대학교/교수) - 배운철(한국NFT콘텐츠협회) - 예자선(법무법인 광야/변호사) - 정영훈(한국소비자원/책임연구원) <input type="checkbox"/> 토론 - 최은창(MIT테크놀로지리뷰/편집위원) - 심준보(대학생/일반이용자)	<input type="checkbox"/> 좌장 : 조용호(전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input type="checkbox"/> 발제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 <input type="checkbox"/> 토론 - 박성준(울산항만공사 시민소통위원회) - 여인표(전 대전광역시 대덕구공동체센터) - 민재영(D LAB/연구소장) - 송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윤지(부산제일경제/기자) - 박영미(부산평생인재교육원) - 이진우(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00 ~13:00	휴식(점심시간)		
	4. 디지털 협력과 IGF의 역할	5.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	-
13:00 ~14:30 (90')	<input type="checkbox"/> 사회 - 전응준(변호사/KrIGF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발제 -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교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input type="checkbox"/> 사회 - 이재현(건국대/학부생) <input type="checkbox"/> 발제 - 이재현(건국대/학부생) - 정지현(건국대/학부생) <input type="checkbox"/> 토론 - 권혁진(순천향대/교수) - 장항배(중앙대/교수)	
14:30 ~14:40	휴식		
	6.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및 국제기구 동향	7.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 - 블록체인 핀테크 규제 및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8. 우크라이나와 사이버안보
14:40 ~16:10 (90')	<input type="checkbox"/> 발제 - 장시영(한국인터넷진흥원/선임) - 최현아(한국인터넷진흥원/주임)	<input type="checkbox"/> 사회 : 임가영(EG@IG) <input type="checkbox"/> 발제 : 박근영(EG@IG) <input type="checkbox"/> 토론 - 최윤일(유:온오프 프로젝트/총괄이사) - 임명수(블록체인지원센터/센터장) - 이대호(정당인) - 이근주(핀테크산업협회/회장)	<input type="checkbox"/> 사회 : 유인태(단국대/교수) <input type="checkbox"/> 발제 : 이진우(단국대/학부생), 고준영(단국대/학부생) <input type="checkbox"/> 토론 - 오지원(단국대/학부생) - 최은창(MIT테크놀로지리뷰/편집위원)
16:10 ~16:20	휴식		

16:20 ~17:50 (90')		9. 스마트도시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10. 메타버스 내 인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
		<input type="checkbox"/> 사회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변호사) <input type="checkbox"/> 발제 : 김수연(건국대/학부생) <input type="checkbox"/> 토론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 황종성(NIA/연구위원) - 김형태(스마트도시협회/부장)	<input type="checkbox"/> 사회 : 박은렬(건국대학교/학부생) <input type="checkbox"/> 토론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의장) -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정책활동가) - 김성환(카카오/선임연구위원) - 박경신(고려대학교/교수) - 이예은(건국대학교/학부생) -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 이철우(게임관리위원회/변호사) - 정일진(루트컨설팅미디어콘텐츠/센터장)

o 온라인(Zoom) 참석 패널 파란색 표시로 구분

o 세부적인 워크숍 세션 논의 결과는 [7. 워크숍 세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행사 평가

1) 참석자 통계

- 총 사전등록자 : 257명 / 설문조사 응답 인원 : 63명
- 참석인원 : 총 330명 (참석자 172명(53%), 유튜브 시청 158명(47%))
 - * 참석자에 각 워크숍 세션 패널 포함
 - * 유튜브 시청은 로그인하여 시청한 인원만 카운팅 하였으며, 각 세션마다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음

2)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 2022 KrIGF 평가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공유

- ▶ 각 주제별로 모두 관심이 있어 하루 종일 강의실을 순례하며 욕심껏 들었고 얻은 것도 많음 발제와 발표, 사회를 학부생들이 맡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고 완전한 믿음이 안 갔으나 막상 참여해 보니, 바로 이 세대들의 아젠다에서 이들이 문제 제기하고 발언하는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기성세대의 관계자들과 비교하여 경험은 좀 부족할지라도 인식력에 있어서는 문제없음. 맨 마지막 교육실2 세션은 시간이 모자랐던 것이 매우 아쉬움.
- ▶ 최근 인터넷주소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점유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인터넷주소관리체계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일반인들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함.
- ▶ 인터넷정책주소위원회의 출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 다양한 패널 구성이 좋았습니다. 다만 다양한 발제에 대해 사회자 등 누군가의 정리가 마지막에 필요해 보입니다.

- 2022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자체 평가

- ▶ 각 세션별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세션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각 제안자의 노력이 필요함
- ▶ 세션 구성 및 진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원활한 세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 충분한 수의 워크숍 세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 워크숍 세션 제안서의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모두 협력하여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서 세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함

o 2022 KrIGF 개선방안 논의

- 참여도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은 좀 심각히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 향후 어떻게 할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KrIGF가 다른 어느 포럼과는 다른 특성들을 부각시키며 진행을 해야 사람들이 의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업계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패널 구성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출 대비 KrIGF 행사가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잘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출내역을 검토하여 내년 행사에 개선할 점을 파악해야 함
- 좋은 세션을 만들기 위해 지출내역을 보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세션의 질을 높이는데(발표자와 토론자 리워드 등) 사용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행사일정을 집중하여 오후 세션만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세션 일정을 조정하면 오후 일정만으로도 충분한 행사가 가능하며 참여자의 세션 참여도 용이해짐

5. 결산

항목	세부항목	수량	단가(원)	예산(원)	비고
행사장 임대료	회의실/교육장등	4실	-	2,959,000	
전문가활용비/ 인건비	토론참석자 교통비	5명	100,000	502,500	
	세션별 문자통역비	1식	-	1,584,000	
	서포터즈 지원비	14명	100,000	1,606,000	우수보고서 (2명)포함
	현장 지원인력	10명	150,000	1,502,500	교육일 포함(2일)
	영문 번역비	1식	-	1,000,000	예정
온라인생중계/ 장비임차	유튜브/줌 생중계운영	1식	-	9,500,000	사진촬영/ 과기부인터뷰 포함
	노트북 대여	10대	50,000	500,000	
중식 및 다과등	참가자 중식/다과,음료 등	1식	-	1,595,410	
기프티콘/주차권	기프티콘	1식	-	1,503,145	
	주차권	1식	-	450,430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홍보/웹자보/ 포스터 제작 등	1식	-	3,770,200	
사무용품/ 방역용품	인쇄,문구류,명패 등	1식	-	1,623,000	
	마스크,손소독제, 체온계 등	1식	-	503,000	
총 지출금액				28,599,185	

※ 후원 현황: 가비아(100만원), 카카오(250만원), 오픈넷(10만원) 등 360만원

7. KrIGF 행사 사진

1) 개회식



2) 트랙1



3) 트랙2



4) 트랙3



8. 워크숍 세션별 결과보고서

작성자 : 박지환

세션명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2022.7.15.(금) 10:30 ~ 12:00	장소	이룸센터 B1 누리홀
참석자	사회	박지환(오픈넷/이사)	발제
	패널	박정섭 (KISA/센터장)	김상민(가비아/차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교수)
		이동만(KAIST/교수)	

제안내용	<p>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 작년 개정되어 인터넷주소정책심의 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심의의결 권한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기반한 각 이해당사자별 구성을 명실상부하게 하였다.</p> <p>그에 따라 7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맞추어 새로 구성될 제1기 주소정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각 관계자들은 어떤 바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p> <p>아울러 인터넷주소법 개정을 기화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생산이라는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p>
요약내용	<p>워크숍에 참여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법 개정의 취지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정책의사 결정과정의 참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함.</p> <p>다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 미흡,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향식 위원 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 위원회의 의결 권한의 형해와 우려의 목소리 등을 공유하면서 개정된 법 내용에 걸맞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함.</p> <p>한편 정부/공공부문에서는 법정 위원회의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고, 인프라 측면을 넘어서는 정책 논의 활성화 등 법과 시행령 개정의 함의를 다수 도출하여 공유함.</p> <p>이어 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제안 사항 및 새로 출범할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나 안건이 구체적으로 다수 도출되었음.</p>

논의
세부
내용

1. 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총평

(1) 산업계 : 가비아 김상민 차장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가 상향식으로 참여하기가 제한되었는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식 참여 절차가 개선되어 정책 발전에 기대를 하고 있음.

(2) 정부/공공기관 : KISA 박정섭 센터장

법 개정을 통해 KISA 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내부적으로 변화가 느껴지며, 법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점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임. 주소자원 등 인프라 뿐 아니라 인프라 위에서 구현되는 정책에 관한 소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3) 시민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이번 개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거버넌스 원칙,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다만 현재 경직된 법정 위원회 운영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단순히 형식적 측면 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 실질적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되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부와의 소통이 순탄치는 않았음. 주소자원정책 영역에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필요.

(4) 학계 : KAIST 이동만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 교수

그간 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 등을 뛰어넘기 위해 여러대의 국회를 거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함. 인터넷의 개방적 구조에 맞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며, 다른 분야의 정책 논의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길 희망함.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민간이 주도하였는데 2004년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었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소자원정책을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의해 민간 자율로 주도하는 흐름에 정부의 책임이 일부 강화되는 점 등이 법과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반영되었다고 보며 이 같은 취지가 운영과정에 잘 반영되었으면 함.

2. 1기 주소정책위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의제, 안건

(1) 주소자원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2)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 각 이해당사자가 책임감 있게 정책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 인프라 측면 외에도 구체적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3) 글로벌한 인터넷거버넌스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의 자체적 운영원칙을 확고하게 수립 및 글로벌 주소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 참여 독려 및 지원

(4) 과거 심의위원회 시절 심의만 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게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 방안, 주소정책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보완/지원 방안

(5) .kr이 공공도메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방안에 관한 논의 시작

(6)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 소극적인 자문 기능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권한 위임까지,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 커뮤니티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실험, 신뢰

**워크숍
총평**

인터넷주소자원 정책과 관련한 각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였으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개정예 참여한 국회의원실 측에서 불참하여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논의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임.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후에 새로 출범할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각 이해당사자들이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위원회가 경청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본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부, KISA가 보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기존 KIGA 참여자나 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세션명	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일시	2022.7.15.(금) 10:30 ~ 12:00	장소	이룸센터 2F 교육실1 + 온라인
참석자	사회	이재영(동국대/VoY@IG)	발제 / 토론 박성준(동국대학교/교수) 배운철(한국NFT콘텐츠협회) 예자선(법무법인 광야/변호사) 정영훈(한국소비자원/책임연구원)
	토론	최은창(MIT테크놀로지리뷰/편집위원)	심준보(대학생/일반이용자)

제안내용	<p>작년,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무렵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무수히 듣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무언가 준비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NFT 기술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속에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자산을 넣어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진 기술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NFT 기술은 마치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줄 기술인 양 언급된다. 또한 플랫폼들은 유명인들의 NFT 관련 소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인터넷 내의 새로운 소비행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NFT 바람에 비해서 규제의 행방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p> <p>저작권상의 논의나 원본증명이라는 NFT 기술의 핵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가상의 재화를 거래한다면 장치 개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NFT를 이용한 거래의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며 불완전한 기술로 도용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행태는 장치 새로운 인터넷 시장의 신용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NFT 기술을 통한 거래에서의 법적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술과 거래의 당위성보다는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불완전한 시장에 소비자가 투입되지 않도록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 방안과 법적 기준을 논의한다면 다가올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p> <p>□ 쟁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FT 기술은 무엇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2. 산업계에서는 NFT 기술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3. 현재의 국내 법체계 내에서 NFT 기술을 이용해 고유의 재화를 거래한 소비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없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나 법적 조정 방향이 있는가? 4.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NFT 거래시장은 어떤
------	--

	<p>체계를 가져야 하는가?</p>
<p>요약내용</p>	<p>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NFT 기술에 대한 개념과 NFT 소비자에 대한 분류를 학계와 산업계의 패널에게서 듣고, 법조계의 패널과 한국소비자원의 패널로부터 NFT에 얽힌 법률관계와 시장의 미래를 듣는 세션이었음.</p> <p>모든 패널이 중점적으로 주장한 것은 NFT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임. 규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슷했지만, 사업자 내부에서 자체적인 규제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리기도 했음.</p> <p>또한 구체적인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등의 논의보다 기존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토론하는 기회가 됨. 특히 중소 마켓플레이스들의 사업자 신고의 필요성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패널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음.</p>
<p>논의 세부 내용</p>	<p>□ 발제</p> <p>발제 1 – NFT 기술은 무엇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동국대학교 박성준 교수)</p> <p>소비자는 인터넷, 블록체인 체계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임. 블록체인 컴퓨터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컴퓨터로써 소비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기 위한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음. 즉, 소비자가 생성한 자산을 소유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등록시켜줄 수 있음. NFT든 암호화폐든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함. 수많은 암호화폐 토큰 중에 ERC721이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주는 것임. 현재는 ERC1155라는 표준도 나오고 있음. 이런 NFT로 창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한 서비스 중 부동산 생태계를 예를 들 수 있음. 현재 부동산 생태계는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블록체인의 특성상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보장해줄 수 있음. 신원확인, 등기부등본 등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체해주기 때문.</p> <p>발제 2 – 산업계에서는 NFT 기술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NFT콘텐츠협회 배운철 위원장)</p> <p>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NFT는 어떤 실체를 가진 오프라인, 물리적 실체, 디지털 실체, 실체를 가진 자산을 창작자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임. 고로 창작자를 찾아내고 원본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고, 본인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거래가 가능해짐. 산업계에서 NFT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생산하고 창작하는 관점과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음. 소비자 관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소비자는 NFT를 단순하게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돼야 함. 첫 번째로는 희귀품을 수집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인 수집형이 있음. 수집</p>

시장에서 구매하는 심리를 이해 못 하는 것처럼 이런 소비자의 구매 결정의 위험성이 NFT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음. 두 번째로는 차익을 바라는 투자형이 있음. 이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구매자 개개인이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고 주식시장과 다름이 없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멤버십형이 있음. 오프라인 시장의 모델과는 다르게 메타버스에 와서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NFT를 구매하는 유형이 있다는 뜻임.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콘서트가 열렸을 때 소속감을 얻기 위한 구매자 등이 그것임. 이러한 유형들은 NFT 시장에서만 특별히 보이는 유형들이 아님. 고로 NFT가 특별한 취약점 때문에 불완전한 시장이라고 불릴 필요는 없음.

발제 3 - 현재의 국내 법체계 내에서 NFT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재화를 거래한 소비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없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나 법적 조정 방향이 있는가?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

먼저 법을 알아보기 전에 NFT에 얽힌 소유관계, 투자 관계를 알아봐야 함. NFT는 예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업이며 거래에서는 코인이 사용됨. 즉 NFT가 코인의 사용처가 되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됨. 이때 중요한 것은 코인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임. NFT의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의 코인은 채굴 방식이지만 처음에 발행해놓은 것은 회사가 가지고 거래를 기록하면서 블록을 생성할 때 참여자에게 신규 코인을 만들어서 주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사업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NFT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적 재산권 침해, 소유권 행사 불가, 탈취, 사이트 이용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이 문제들은 모두 민, 형사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음. 하지만 법적으로 신원을 밝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에서는 NFT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표로서 투자나 결제 목적으로 쓰이면 가상자산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각자 암호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판매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어있는데 NFT 거래를 통신판매로 본다면 NFT 플랫폼이나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중개로 볼 수 있고, 이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져야함. 10대 초반까지 NFT 이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이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사업자들이 등록되어 금융위원회가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발제 4 -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NFT 거래시장은 어떤 체계를 가져야 하는가? (한국소비자원 정영훈 책임연구원)

NFT의 대체 불가능성은 크게 보지만 폰지사기등의 불안함은 남아있음. 또한 소비자들도 묻지마 투자처럼 사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투자자라고 가정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 소유권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이나 오픈망에 박혀있는 파일을 본인이 가졌다고 봐야 하냐는 문제도 있음. 이때 중개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개소에서 상품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망에는 남아있는 이 상품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불할 수 있어도 누가 만약 코인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등의 문제점 등이 남아있음. 고로 NFT 시장의 올바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① NFT의 효용성에 비해 '디지털 수집품'에 과몰입된 용어 표현을 경계해야 하며 ② NFT의 유명세에 편승하는 기업의 과도한 프로모션이 자제될 필요가 있고 ③ 무분별한 NFT 발행은 망과다 사용, 콘텐츠 차별성 저하, 구매자의 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 창작자들이 알아야 하며 ④ NFT가 가진 기술적 혁신을 보다 널리 활용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토론

MIT테크놀로지리뷰 최은창 편집위원 :

- 오픈마켓 플레이스에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NFT 상품을 샀을 때 취득권을 취득하고 재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임. 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음. 고로 플랫폼 책임 기준이 필요함. 모든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자 신고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음. 신고해야만 피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 신고를 하는 방식의 규제가 적절해 보임.

- 중소기업 마켓플레이스가 자체적으로 거래 검토 제보 과정 등의 NFT 발행 주체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 '노 유어 커스토머'라는 이름으로 거래 검토 제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처럼 약간의 고민만 있다면 거래 피해들이 줄어들 것임. 다만 소비자가 수집형으로 샀는지 투자형으로 샀는지, 멤버십형으로 샀는지 알 수도 없고 금액으로 나눈다고 해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화한 규제가 아닌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UNIST 심준보 학부생 :

- 소비자가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님. NFT의 경우 파이낸스 조작이나 인플루언서 고용 홍보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간파하기 어려운 조작을 할 수 있음. 또한 NFT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들이 해킹당하거나 사이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산업 환경에서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을 배운철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음.

배운철 :

-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함. 다만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켓플레이스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규정해야 함. NFT를 가상자산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져야 하고, 디지털 전자적 상거래로 본다면 하면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 이후 기존의 제도 및 법률에 적용하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자 신고 정도는 산업계에서 빠르게 할만한 부분임. 다만 NFT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NFT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음. 저작권의 경우 NFT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임. 그렇기 때문에 NFT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슈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됨.

- 저작권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안한 내용을 말하면 NFT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진품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으면 인증평가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임. NFT를 발행할 때 인증번호가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하게 될 것임. 그 후 인증번호가 있는 NFT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를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도 좋아 보임.

	<p>박성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논의에서 NFT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음. 중요한 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음. 하지만 이 건전성 확보는 기업에만 맡기면 안 되고, 정부 기업이 협력해야 함. NFT 마켓플레이스의 사업자 신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가 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요청해서 빨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제도를 만들어야 함. 블록체인 시장의 건전한 형성은 국가적 IT 경쟁력을 만드는 길이고 청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시장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함. <p>예자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들은 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임. 많은 정치적, 금전적 문제가 엮인 문제가 암호화폐, NFT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제대로 파악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함. <p>정영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차피 제도를 악용할 사람들은 악용할 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악용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임. 대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가, 누가 역할을 할 것인가 규제 차원에서 다를 부분은 다루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p>워크숍 세션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에서 더욱 많은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토론 시간에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의 하지 못하였음. 발제에 대한 분량을 더욱 줄이고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양상으로 더 끌 수 있었으면 더욱 좋은 세션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견해차가 있는 패널들이 골고루 있어의견 대립과 해결책 모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패널 구성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음. ○ 패널 모두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특이성, 사업 구조의 면밀한 관찰과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이를 발제에 담았음. 공통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주제라고 생각돼서 본 포럼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됨. 다만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각각 기술과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파트가 있어서 발제 시간을 많이 뺏겼다고 생각함. 보다 패널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잘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잘라내고 논의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NFT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이었지만, 기술의 특성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음. 이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 제시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논의 시기가 적절하기도 하고 패널들의 의견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와 장을 더욱이 빌려 추가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해 보임.

세션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일시	2022.7.15.(금) 10:30 ~ 12:00	장소	이룸센터 2F 교육실2 + 온라인	
참석자	좌장	조용호(전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발제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
	토론	박성준(울산항만공사 시민소통위원회)	여인표(전 대전광역시 대덕구공동체센터)	
		민재영(D LAB/연구소장)	송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윤지(부산제일경제/기자)	박영미(부산평생인재교육원)	
	이진우(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안내용	<p>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행정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p> <p>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를 기초로 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다.</p> <p>그리고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개방성을 토대로 기업, 시민사회,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했다.</p> <p>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기 속에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면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와의 관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 <p>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p> <p>*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p> <p>◎ 주요 쟁점</p> <p><쟁점1>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목표와 필요성,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p> <p><쟁점2>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가?</p> <p><쟁점3> 기존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나 법령정비 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가?</p> <p><쟁점4> 지속가능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정부, 공무원, 기업, 창업가, 시민사회,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p> <p><쟁점5>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 위에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p>
요약내용	<p>1.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해석 :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서 공통의 원칙이라든지 규범 그리고 의사 결정 절차</p>

	<p>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이나 지배구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배경, 정의 3. 우리나라는 인터넷 거버넌스 6대 원칙 소개 4. 인터넷 거버넌스 기반의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사례 소개 : 정부24, 온나라PC영상회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서비스 개선 등 5.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에서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방향 : 디지털이즈~트랜스포 6. 결론 : 인터넷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기업, 창업가, 시민사회, 언론,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세부 내용</p>	<p>이수영 :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그리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물인터넷 활용한 재난 대비 등 관련 사례 계속 소개</p> <p>조용호 : 사이버라는 게 가상 공간인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은 하나의 가상 공간이었고 현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어느덧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도 처리할 수 없고 행정적인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p> <p>김윤지 :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을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혁신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박영미 :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의 목표는 우선 행정 서비스를 혁신해서 더 나은 삶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의 주인 국민들이 국가 정치와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 삶과 사회의 일부가 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의 목표를 잘 인식한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디지털 과학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p> <p>민재명 : 디지털 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민주주의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라는 시스템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세기 동안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세계가 함께 변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직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방식이 새로이 제기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른 조직 운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이진우 : 기존의 법 제도는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p> <p>여인표 :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고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어놓거나 스스로 찾아야만 혜택을 주는 지원 제도는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이 불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디서 일하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국민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음</p>

	<p>에도 적재적소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 정부에 뒤처지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p> <p>송채원 : 인터넷 거버넌스는 디지털 전환기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정부 조건 취약 계층은 가장 먼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더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이 수동적인 서비스 소비자로 남게 된다면 인권 사회로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p> <p>박성준 :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접속은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한 번씩 경험을 해 봐야 하고 내가 친구, 지인으로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단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p>
<p>워크숍 세션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구성되고,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부혁신, 적극행정의 대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디지털 대전환 속 인권과 사람 중심의 정책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하였으며,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를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델에 대한 관심과 방향에 대한 견해를 같이함. - 디지털화된 것을 트랜스포머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위에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지와 디지털 세상에서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 정부의 신청주의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터넷 거버넌스 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거버넌스와 인터넷 서비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함. - 인터넷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정사회보다는 인권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예컨대 가치가 대립할 경우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여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공론회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기능과 역할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넷문디알 회의에서의 원칙과 같은 취지로 이해되고 분석되었음. - 4차 산업혁명 이후 정부는 기존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필요성을 그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 나날이 발전하는 IT기술들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는 그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제안하고 실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였음.

세션명	디지털 협력과 IGF의 역할			
일시	2022.7.15.(금) 13:00 ~ 14:30	장소	이룸센터 1B 누리홀	
참석자	사회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발제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교수)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제안내용	<p>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7차를 맞게 되었다. WSIS에서 전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IGF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IGF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토크쇼라는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매년 IGF 사이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들(Best Practice Forum, Dynamic Coalition 같은)을 계속해왔다.</p> <p>한편,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어왔다. 유엔 개발을위한 과학기술위원회(CSTD) 산하에 협력 강화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이 만들어져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로드맵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현재 이러한 디지털 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위한 IGF의 역할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뉴욕에서 전문가 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가 개최되기도 했다.</p> <p>WSIS 이후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한국의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여, 향후 한국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p> <p>주요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GF의 역사와 현재 활동에 대한 소개 - 세계적 디지털 협력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역사와 쟁점 소개
요약내용	<p>첫번째 발제자인 이영음 교수가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결과로 2006년부터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의 역사적인 맥락, MAG이라는 자문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워크샵 등 IGF의 구조, 그리고 글로벌한 다자간 정책 협의의 장으로서의 IGF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KriGF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p> <p>두번째 발제자인 오병일 대표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기술 특사 임명, 디지털 협력 로드맵,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등 최근 UN 중심의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흐름과 함께, 그 일환으로 IGF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IGF Leadership Panel 제안과 IGF 전문가 그룹회의 개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p>

논의
세부
내용

첫번째 발제자인 이영음 교수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의 개요와 역사, 그리고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대해 소개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2003년,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GIS)의 산물이다. 2005년 Tunis 회의에서 IGF 설립을 결의하여,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2년에 17차 IGF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IGF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화를 나누는 논의의 장이다. MAG이라는 멀티스테이크홀더 자문회의에서 IGF 회의의 프로그램을 논의하며, IGF 워크숍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IGF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별, 지역별 IGF 및 Youth IGF 도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는데, KriGF 역시 그 중 하나이다. IGF는 인터넷 정책 및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이해와 합의 수준을 높여왔지만, 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권한은 없다.

KriGF는 KISA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부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회의의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두번째 발제자인 오병일 대표는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공간에서 국가간,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UN의 노력과 그 일환으로서 IGF의 강화 흐름에 대해 소개하였다. 2018년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 구성되어 2019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세계적 디지털 협력을 위한 개선 방안 개발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마련할 것과 그 일환으로 UN 사무총장은 기술 특사를 임명할 것, 멀티스테이크홀더 시스템 접근을 권고하였다. 이어 UN 사무총장은 2020년 6월, 디지털 시대 인권보장, 디지털 협력을 위한 더 효과적인 구조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협력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어 UN 사무총장은 2021년 9월, 우리 공통의 의제(Our Common Agenda)를 발표하여, 12개의 행동 영역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의 체결이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화된 협력을 위해 IGF를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IGF Leadership Panel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에는 IGF 전문가 그룹회의가 개최되어 IGF가 어떻게 디지털 협력 증진과 제안된 사업들의 이행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발제 후, 서구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이 대결하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환경에서 UN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오병일 대표는 UN 주도라고 ITU 중심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국가간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를 강조하는 IGF 플러스 모델로 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유엔 차원에서 이런 글로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터넷이 분절화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힘들어질 것이라는데 위기의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자는 글로벌 IGF 참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개인정보와 같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다 같이 얘기하면서 공통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았다고 평가하였으며, IGF가 뭔가 결과물을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마무리하였다.

<p style="text-align: center;">워크숍 세션 총평</p>	<p>워크숍은 두 개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서부터 2022년 IGF 전문가 그룹회의까지 주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동향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최근 동향에 대해 짧은 시간에 주요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워크숍의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한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 참여자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에라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p>
---	---

세션명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		
일시	2022.7.15.(금) 13:00 ~ 14:30	장소	이룸센터 1F 교육실2
참석자	사회	이제현(건국대/학부생)	발제 이제현(건국대/학부생) 정지현(건국대/학부생)
	토론	권혁준(순천향대/교수)	장항배(중앙대/교수)

제안내용	<p>1) 제안 취지와 연구 필요성 및 목적</p> <p>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장에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이 시장에서 벤처 기업은 시장경쟁도 하지 못하고 플랫폼기업에게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는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독과점 기업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카카오택시를 예시로 들면,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택을 바탕으로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니 국내의 중소형 콜택시, 대리운전 사업은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히 무너졌다. 카카오는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이전 사업에서 확보한 자금, 사용자를 토대로 경쟁 불가능한 수준의 공격적인 사업개시로 시장을 잠식해버린다. 이후 적자를 내더라도 시장을 선점한 뒤에 자금 회수를 월 구독료 혹은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낮은 효용을 보답한다. 그렇기에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기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와서 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하고자 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사용자 파이 싸움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시장은 독과점 형태로 나아간다. 해외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국내 시장에 기업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쟁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지양해야 하는가? 규제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상생의 방향성은 없을까?</p>
요약내용	<p>기존의 시장구조와는 다르게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과점 방식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하나의 상품은 소비자의 각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기업, 중견, 중소등 여러 사업체가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하나의 기업체가 시장 전체를 가져가 다른 취향을 고려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어 다른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크게 세워둔다. 이는 카카오와 유튜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다. sns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 사용자들이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 사업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체들은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렇기에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신규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사회 분담금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업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p>

논의
세부
내용

Q.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 부담금 형식으로 기업의 축적된 정보들을 신규 진입하는 벤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성은 어떤가?

A.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과징금 형태로 부여하는 그림은 좋지 못해 보인다.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때 있어서 위축될 수도 있고 시장 진입, 신규시장 진출에 밀려 해외 기업에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Q. 사실 이 부분들을 동의해주실 줄은 몰랐다. 너무 기업 규제형식이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랬던거 같다.

A. 다만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상생이라 함은 대기업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도 무엇인가를 대기업에게 주는 것 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상생일 수는 없다. 상생을 하려면 이 발제안에서 조금 수정보완을 한다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Q. 그렇다면 정보공유를 해주는 주체는 정부의 공기관이 좋을지 민간기업이 좋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무조건 민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만 정부부처에서 금지어는 아이핀이다. 현재 아이핀을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공기관에서 행하게 되면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들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민간기업에서 정보공유를 해준다면 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새 시장을 열고, 경쟁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기에 민간에서 하는 것을 추천할 것이다.

워크숍
세션
총평

이제현, 정지현 : 기업들에게 규제안 방향으로 정보공유를 가져왔을 때 사실 세션분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많은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상생이라고 하였지만 대기업에게만 의무를 가하는 느낌이라 아이디어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다만 세션토론을 진행하면서 세션분들이 많이 보충해주시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디서 보완을 해야 할지 잘 감이 오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 부분들을 구체화 시켜 정리해주셔서 생각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아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거로 느껴진다.

장혁준 교수) 저는 학교에서 경제 금융학과에서 핀테크를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해결 원리는 전부 다 은행지점이었고 항상 은행에 가야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디지털 혁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경제과에 들어왔는데요. 핀테크 그런 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용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회과학을 하신다고 기술 수용에 대한 부분들, 이때까지 봐왔던 케이스 사례를 보고 연구하고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기술은 혁신성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린 기술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다못해 상생하는 부분들도 기술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혁신 수용에 대한 부분을 잘 내재하고 여기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박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중에 저보고 당신은 직업을 없애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하신 거고 이런 게 많은 이슈가 된다면 조화롭게 혁신성에 대한 부분을 피커하면서 또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항배 교수) 우리 공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회자께서 사회과학이라고 말씀주셨지만 사회과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부분이고 사람은 연구하면 딱 떨어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확률이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대중이 존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학적 관점이었다면 단방에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접근방법을 보게 되면 확률의 관점에서 또 다른 방법, 다시 말하면 정보 공유라는 단순한 주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정보 공유를 아젠다로 만들어주셔서 토론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상당히 저는 좋고요. 앞으로 이런 시도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논의하는 장이 되는 것처럼 서로 소통, 조정을 통해서 함의를 찾아내는 함의의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션명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및 국제기구 동향		
일시	2022.7.15.(금) 13:00 ~ 14:30	장소	이룸센터 1B 누리홀
참석자	사회	장시영(한국인터넷진흥원)	발제
			장시영(한국인터넷진흥원) 최현아(한국인터넷진흥원)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22.4.28)하여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IP주소,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하였다. -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논의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란 무엇이며, 관련 논의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는가? 이러한 질의에 대해 동 세션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이슈인 글로벌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국제기구(ICANN, APNIC) 내 최근 주요 동향을 소개하여 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이해증진 및 여러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주요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 및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소개 -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ICANN, APNIC) 개요 및 주요 동향 소개 -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요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주소자원(IP 주소, 도메인 이름) 개념 및 관리체계, 국내 동향 소개 - 인터넷거버넌스 개념 및 관련 국제기구 소개, 논의 경과('69년~현재) 소개 - 인터넷거버넌스 국내외 관리체계 소개 -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기구(ICANN, APNIC, APTLD) 조직 구성, 주요 업무, 최근 주요 논의 이슈 등 소개 - 한국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변화 및 KISA의 역할·주요성과·핵심과제·비전 등 소개 - 발표내용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 진행
논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 및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논의 경과 소개 - 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관리체계 설립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미국 중심의 ICANN(인터넷주소관리기구) 설립과 이에 대항하여 UN 중심의 국가 간 관리체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이전하려는 중국, 러시아 간 국제적 대립이 발생. - 13년도에 발생한 스노든 사건(미국 정부의 전 세계 개인정보 감시 폭로) 발생 후, 미국 주도의 ICANN 관리체제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16년도에 IANA(인터넷주소 관리권한)를 비영리민간기구인 ICANN에 완전히 이전함.

-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제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만이 아닌 인터넷과 연관된 다양한 이슈(개인정보, 정보보호, 사이버인권 등)로 확대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확산하게 됨.
-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기구(ICANN, APNIC, APTLD) 개요 및 주요 동향 소개
 - (ICANN) IP주소, 도메인이름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민간비영리 기구. 1년에 3번 정례회의가 개최되며, 지난 달(6월), 제74차 정례회의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됨. 본인은 정부자문위원회(GAC) 한국대표로 80여개국 대표와 함께 관련 정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GAC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터넷 연결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s) 생성을 위한 정책 논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에 따른 WHOIS(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 내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음
 - (APNIC) ICANN으로부터 IP주소, AS번호 지역별로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 1년에 2회 대륙별 IP주소/AS번호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기술 정책적 논의를 진행함. 국내의 경우, APNIC으로부터 IP주소/AS번호를 할당받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ISA)에서 ISPs 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학 등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진 조직들(독립사용자)은 ISPs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 가능.
 - => ICANN, APNIC 모두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책수립 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검토 및 논의 등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됩니다.
 - (APTLD) 아태지역 내 국가최상위도메인(.kr, .한국 등)을 관리하는 기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 KISA)들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로, 1년에 2번 정례회의 개최. 회원국 인터넷주소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KISA에서도 회원국 및 이사로 참여 중임.
- 인터넷주소법 개정('22.7.12)에 따른 개정 주요이슈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역할
 - 법 개정 주요이슈(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권한 및 인원 확대 등 민간의 정책참여 역할 강화, 인터넷주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KRNIC의 법제화) 소개 및 이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요 역할, 비전 및 향후계획 등 소개.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질의 1) 코로나 이후 ICANN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 추진현황 설명 요청.
 - => ICANN의 정책결정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다중이해관계자주의 원칙에 따라 정책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에, 발표자료에서 언급한 신규 gTLD 생성 정책이 24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이사회에서 관련 기구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현재 검토 중이며, 이후 금년도 하반기부터 가이드북(안내서) 작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예정.
 - (질의 2) ICANN 등 국제기구 내 국내 참여가 저조한 측면(주요직 진출 부재 등)이 있어, 국내 목소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됨. 이에, 국제기구 주요직 진출 등 국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계획이 있는지 문의.
 - => 현재 KRNIC에서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파악 및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과정 개발, 국제기구 연계 차세대 인재양성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워크숍 세션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 및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국제기구 주요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다만, 참석자가 생각보다 적었으며, 60분 가까이를 계속 발표하는데 있어 참석자들이 지루하거나 몰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향후에는 참석자 대상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활동(예시 : 퀴즈 등)도 추가하여, 단순히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발표자-참석자 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력 증진 및 상호소통할 수 있는 세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

세션명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 - 블록체인 핀테크 규제 및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시	2022.7.15.(금) 14:40 ~ 15:10	장소	이룸센터 2F 교육실1	
참석자	사회	임가영(EG@IG)	발제	박근영(EG@IG)
	토론	최윤일(유:온오프 프로젝트/총괄이사)	임명수(블록체인지원센터/센터장)	
		이대호(정당인)	이근주(핀테크산업협회/회장)	

제안내용	<p>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 핀테크 규제 및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p>웬홀과 로닌 해킹 사건으로 보는 디지털자산 보안 문제 분석에 대한 연사의 발표와 핀테크에 있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적용 사례, 암호화폐 NFT 등이 적용된 핀테크 산업의 시장 분석 및 전망에 대해 연사의 발표를 듣고, 블록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과 블록체인의 위험성 및 한계에 근거한 규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p>
요약내용	<p>블록체인의 발전방향, 현재의 규제상황과 앞으로 발전을 위한 방법에 대한 기본 배경지식을 연사분들의 발표를 통해 배우고,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방향인 활용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p>
논의 세부 내용	<p>블록체인은 사용자 친화성을 갖춘 기술이 되어야 한다. :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기반이 아닌 스펙기반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통 금융의 로직과 기술적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딧이 필요하다. 또 UI/UX의 개선을 통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기존 IT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p> <p>블록체인 규제 :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이로 파생된 가상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만 있는 상태이다. 핀테크 사업은 이 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믿는 사람들의 신뢰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양자는 공생하기 어려운 사업군이다.</p> <p>블록체인과 정부 조직 : 인류의 발전에 따라 유사 정부조직 DAO의 적극적 포용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약을 만드는데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었다. ICO 합법화 여부(금융위원회 소관), 과세 쟁점(중앙정부 소관, 의회 논의 필요), DAO 제도화(국화 소관).블록체인 사업 활성화 지원 (1. 기관을 위한 자본 투자, 2. 교육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인프라 확충)</p>

	<p>전세계적 디지털화와 블록체인 규제현황 : 자산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자산의 생태계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핀테크의 등장이 빅테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현재 가상 자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논의에 한정된 상황. 하지만 현재 미국과 EU 그리고 영국에서 범정부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이점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한 상황. 한국은 2017년 정부차원의 금지선언(ICO금지, 유사수신행위 금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입, 보유,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과 금융권의 가상자산 진출금지 정책을 펼침. 2021년에는 국제적 논의 반영을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강력한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했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효용 극대화 기회를 박탈한 상황. 금융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p> <p>토론 : '돈'을 버는데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산업 생태계 안타깝지만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암호화폐로 논의를 한정하기 보다는 NFT를 활용해 명예로서의 보상이라는 개념을 더욱 확대 적용해 서비스를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안정적인 블록체인 자산 운영을 위한 오디의 표준화가 요구된다.</p>
<p>워크숍 세션 총평</p>	<p>오랜시간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고민해오신 연사분들의 식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재 규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빠르게 알 수 있었고 이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더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 오래도록 블록체인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산업군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서로가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워크숍이 DAO의 형태로 더욱 자주 열리게 되면다면 재차 언급되었던 법률과 기술적 지식을 모두 겸비한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KISA에서의 활동이 오늘의 단편적인 워크숍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진행하게 될 것 같다.</p>

세션명	우크라이나와 사이버안보		
일시	2022.7.15.(금) 14:40 ~ 16:10	장소	이룸센터 2F 교육실2
참석자	사회	유인태(단국대/교수)	발제
			이진우(단국대/학부생)
			고준영(단국대/학부생)
	토론	오지원(단국대/학부생)	최은창(MIT테크놀로지리뷰/편집위원)

제안내용	<p>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논의해본다.</p>
요약내용	<p>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요 기관과 핵심시설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한다. 동시에 이러한 공격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지는데, 다양한 테크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이외의 단체들도 지지성명을 표명하고 참전한다.</p> <p>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자의적 행위들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범죄나 핵심기관에 대한 테러와 같이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OSCE와 GGE, 또 최근의 OEWG는 대표적인 규범적 합의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합의들은 서구/비서구 국가 간의 대립, 용어 정립, 스플린터넷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플린터넷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각 국가의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p> <p>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와 MS 등의 다양한 국가/비국가 행위자들의 규범적 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과 교전수칙을 먼저 정립하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아태지역의 정체성을 이용해 동북아 내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p>

	<p>동시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초기 대응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보복을 통한 사이버 역지력의 확보, 피해확산 최소화와 복원능력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p> <p>하지만 한국의 규범적 역할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서방으로의 적극적 편입은 한국의 높은 대중의존도로 인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적극적 편입이 서방의 방패막이 되는 '대리전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한 대립은 균형자의 역할도 어렵게 만든다.</p> <p>따라서 한국은 어떤 세력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보다는, 공조의 차원에서 다양하고 약한 고리를 여럿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높은 ICT 역량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비슷한 중견국들 간의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저개발국에 대한 ICT 지원도 한국 기업의 플랫폼 영향력을 늘리고 한국이 규범적 행위자로 역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p> <p>또한 가짜뉴스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 국내 거버넌스의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ICT기술이 건전한 정보 형성과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의 형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 플랫폼은 향후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독자적 모델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p> <p>다음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해 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더쉽에만 집중할 경우 효율성은 증대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사이버 안보 관련법이 흩어져 있어 일원화된 실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입법에서도 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련하여 참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p> <p>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추진체계에 있어 CIS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는 동시에, 최근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와 관련된 입법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전반을 아우르는 위협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분리되어 있다.</p> <p>결론적으로 민/관을 아우르고 효과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의 유형과 범위, 공유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보안 전문기관인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국정원/과기부/국방부 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현재 나토나 인도태평양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를 통해 국내적 투명성을 향상시킬 경우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확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추진 체계를 참고하여,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의 컨트롤 타워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p>
<p>논의 세부 내용</p>	<p>패널 : 한국의 독자적 규범 형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스플린터넷 상황이 한국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또한 스플린터넷은 인터넷을 논리적 층위에서 끊는 것인데 본 발제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의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컨트롤 타워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것에 대해, 조</p>

직의 규모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관/기업 간 정보 공유와 문체에 따른 은폐가 발생할 수 있는데, CISA에서 면책권을 주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발제자 : 먼저 독자적 규범 형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형성'의 차원에서 정치적 플랫폼이 필요함이 발제에서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이나 워크숍이 한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스플린터넷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면 한국 플랫폼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발제자 : 한국의 경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추진 체계 시스템이 없지만, KISA에서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과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과 초기대응과 확산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다. C-TAS 시스템 즉, 사이버 위협 정보를 회원사 간에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 모델이 더 확산되어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만의 사이버 위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 스플린터넷에 대해 인프라/로지컬/콘텐츠 층위의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열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초당적 합의와 디지털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패널 : 현재와 같은 무규범 상태에서 사실 규범을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 논의가 실효적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있다. 따라서 이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투명한 추적과 정보 공유를 위해 IT기업들을 연결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발제자 : 그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범적 논의를 안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본 발제에서는 먼저 실행할 수 있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국내적 거버넌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향후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국내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사회자 : 물론 현실주의적인 문제가 있지만 규범적 논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탄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와 같은 예외적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 이미지를 고려하고, 이는 정권의 안정도와도 관련이 된다. 이외에도 규범이 후에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 발전할 때도 기존 규범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발제에서 미국은 비정부 행위자들의 정보 공유 비용을 줄이는 여러 제도가 있음을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스인포메이션 등은 민간인들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발제자 :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이버위원회 설치가 아닌 협의체 또는 자문그룹으로 탄력적 대응 구조를 생각중이다. 이전의 구조에서 시민 단체가 직접적 참여가 어려웠지만, 바뀐 구조의 경우 공통적 관심을 갖는 협의체 또는 자문그룹이 만들어지게

	<p>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p> <p>발제자 :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런 디스인포메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도 하지만 이를 바로잡는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 형성이 일인 미디어나 이용자와 같은 바텀업 방식으로만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플랫폼 차원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p> <p>사회자 : 또 위기 대응의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이전에 언급되었듯이 이런 정보 공유를 하는 데에 기업이 가지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경우에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보안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p> <p>패널 : 첨언을 하자면 한국이 사이버 안보에서 미국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스인포메이션에 관련하여,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보 담론에 대해 정부와 기관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사이버 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p>
<p>워크숍 세션 총평</p>	<p>발제의 범위가 다소 넓어서 패널 섭외와 발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는 시의성이 있었으나 향후에 다시 포럼을 준비할 일이 생긴다면 범위를 좀 더 좁히고 구체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이와 별개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배워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같이 논의해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p> <p>향후 포럼의 범위가 커져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과 같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촉진되어 이런 중요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p>

세션명	스마트도시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일시	2022.7.15.(금) 16:20 ~ 17:50	장소	이룸센터 2F 교육실1	
참석자	사회	윤복남(법무법인 한결/변호사)	발제	김수연(건국대/학부생)
	토론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황종성(NIA/연구위원)
		김형태((전)스마트도시협회, (현)스마트 건강 개발 연구소장)		

제안내용	<p>신기후체제의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은 사회경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 공동체 의식 아래 2050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와 탄소중립은 그린디지털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린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그린-디지털 뉴딜의 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스마트 시티이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및 공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p> <p>1st Agenda : 스마트시티, 차세대 도시인가, 새로운 판옵티콘인가? 2nd Agenda : 빅데이터 규제변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 3rd Agenda : 스마트시티를 온전하게 구현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도시화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내부에서는 어떠한 담론의 확산과 합의가 필요한가?</p>
요약내용	<p>스마트도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스마트도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도시는 기술적이고 비기술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스마트도시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도시의 교통, 치안, 의료 등 공공 분야에서 스마트체계를 이뤄 활용되지만, 스마트체계를 활용하는 도시를 모두 스마트 도시라고 일컫는 것은 아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각 공공 분야에서의 업무 개선을 도와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시의 거주민들조차 이에 대한 이해나 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동의에 관련한 가장 큰 우려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도 통용될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상적이고 논쟁적인 담론에서 머무르는 것은 무의미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또한 스마트시티가 국가적 아젠다로서 설정이 될 경우,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이 기술중심적 사고만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경계해야 함. 시민이 개인정보에</p>

	<p>대한 권리를 인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스마트시티와 같은 데이터 활용 산업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p>
<p>논의 세부 내용</p>	<p><스마트도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의견> (김형태 박사님) 시민들은 자신이 어떤 스마트 서비스를 받고 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스마트시티인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함. 개인정보를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양립되는 문제보다는 잘 활용해 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함.</p> <p>(황종성 연구원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세가지를 말함. 첫번째 중요점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도시문제에는 교통, 치안, 에너지문제 등이 있는데 스마트시티로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는 모순이 있음.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라기 보다는 도시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시형태를 말하기 때문. 두번째 중요점은 과거의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봐야하는 것처럼 미래를 논의하려면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보아야한다는 점임. 앞으로의 데이터 체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미래 패러다임에 맞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함. 세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님'에서 '내 정보가 내 의도나 이익에 반하지 않게 쓰임'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p> <p>(오병일 대표님) 사회문제를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회문제를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명확성의 원칙, 하지만 현재 CCTV 활용 현황만 보아도 법적 근거나 사회적 논의 없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많이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음. 스마트도시 시스템 건설에 있어서는 지나친 기술중심적 해결방안이 아닌 주민참여형, 탑다운 방식 등의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스마트도시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상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스마트도시법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 옳다고 생각.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연 향후 미래사회를 대비할 만큼 충분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함.</p> <p>(사회자님 요약)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채 스마트시티 자체만의 기능을 극대화한 형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적인 접근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스마트시티에 어울리는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적용되어 조금 더 미래 전략에 맞는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지의 접근이 존재.</p> <p><스마트시티 내의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완화 균형점> (김형태 박사님)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로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가 가장 먼저 언급되지만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은 '시티즌'을 먼저 언급함. 그 다음에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감시와 조율 방법, 인프라, 기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언급함. 대한민국은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함. 스마트시티</p>

구현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에 성별과 나이 75%, 위치정보 50%, 주민등록번호 5%, 전화번호 15.5% 남짓밖에 되지 않음. 자신에 대한 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태도가 90% 이상.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함, 기술에 대한 교육과 습득, 삶의 질 격차 심화 문제가 있음. 즉, 스마트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상태.

개인정보와 규제완화의 담론적인 이야기 보다 규제 대상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 개인정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제3의 법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며, 스마트시티가 지금보다 더 추진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후에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리빙랩을 금년부터 실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리빙랩을 통해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에 나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개발자, 기획자 분들에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구체화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기획 단계에서 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설계 방안이 마련되고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 완화냐 개인정보 보호 강화냐의 추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와 사회적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황중성 연구원님)스마트시티라는 시대가 왔을 때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패러다임으로는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려움임 있음. 지금의 패러다임은 형식주의적인 부분이 많다.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미래에 생길 데이터들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양임. 그렇기에 계속하여 지금까지처럼 어떤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지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그러므로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시민이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구축해야 할 것임.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나왔을 때의 추적 방식, 대응 방식 등을 확고화하여 가장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또한 현재의 데이터 환경에서 사전규제는 힘들고 사후규제로 가야 더 실질적인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함. 막연하게 미래에는 지금보다 데이터가 많아질 것이므로 규율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현재 규율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그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오병일 대표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임.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논의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임. 이러한 법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짐. 우리가 개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정한 감시시스템을 강요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음. (EX. 현금 없는 버스, 교통카드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버스 이용 내역을 파악하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감독하는 감독시스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중요해짐. 이를 스마트시티와 연계하여 이야기 하자면, 스마트시티 설계 논의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개인정보 흐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하부 단위의 감독시스템이 매우 중요함.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남용의 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매우 중요함.

	<p>(사회자님 요약) 스마트도시 전문가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시민들 간의 대화가 매우 필요함. 이번 진행한 인터넷 거버넌스와 같이 거버넌스 형태의 자치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의 구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논의가 보다 주민참여형 논의로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p>
<p>워크숍 세션 총평</p>	<p>발제문을 작성하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찾아보았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황종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스마트시티는 기술적인 분야와 비기술적인 분야를 포괄하며 비기술적인 분야의 스마트시티의 예로서 도시 디자인을 말씀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중심적 사고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제문을 작성했음에도, 도시의 디자인이 거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이신 패널분의 말씀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트시티만의 규율체계가 필요하기보다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해결되는 것이 향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아닌 도시에서도 공공분야에서는 이미 스마트 체계가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생각해보면, 스마트 시티에 국한되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맹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와 공통된 의견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이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 과정이 무엇을 통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 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제들과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며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p>

세션명	메타버스 내 인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일시	2022.7.15.(금) 16:20 ~ 17:50	장소	이룸센터 2F 교육실2
참석자	사회	이예은(건국대학교/학부생)	발제 박은렬(건국대학교/학부생)
	토론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의장)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정책활동가)
		김성환(카카오 정책팀/선임연구위원)	박경신(고려대학교/교수)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이철우(게임관리위원회/변호사)
	정일진(17정글스튜디오/대표)		

제안내용	<p>메타버스와 인권 확대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지켜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안을 들여다 본 다음에 각 산업계, 기술계 그리고 각종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p> <p>첫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성범죄 둘째, 최근 일본에서 아바타 명예훼손 셋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자율 규제 방향성 넷째, 메타버스와 관련한 정보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논의 다섯째, 메타버스와 정보 격차에 관한 논의</p>
요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은 필요함 - 공적 영역의 과도한 개입시 산업 위축 및 메타버스의 본래 의미 퇴색 우려 - 특히, 이용자의 위치 정보 제공 우려 - 산업계의 자율규제 필요 - 그를 위해 거버넌스적 논의 필요 - 명예훼손 건의 경우 아바타와의 동일성이 되었는지가 관건 - 메타버스 기술의 발달로 아바타와 이용자간의 동일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완전해질 수도 있음.

논의
세부
내용

1. 모두 발언

- 메타버스란?(이수영님)

사이버 월드에서 아바타 형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 함. 최근에 가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 VR, AR이라고 하는 이것들까지 합쳐지면서 좀 더 주목 받음.
우리 인터넷 거버넌스 출발이 인권보호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UN 인권 현장에 반영되어 있는 인권 보호가 결국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공통성을 가짐.

- 인권 논의 필요성(김민님)

신기술의 대장, 새로운 온라인 환경의 등장으로 인한 인권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이 현실 속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필수적임.
메타버스 공간이 현재 온라인 공간이든 간에 오프라인에서 보장 받는 인권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보장 받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
근거로는 UN은 2013년에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권을 결의한 이후에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인권들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결의안을 통해서 선언한 바 있음.

- 인권 논의의 방향성 및 자율규제 (김성한님)

결국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실현하냐 이 부분임. 이거는 산업계나 이용자분들이나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큰 기저에는 합의하는 부분일 것 같고 결국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함.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율 규제를 한다면 어떤 방해물들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검토.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직 알지 못 함.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이 찾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 줄 비전, 욕망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음.

-메타버스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 (박경신님, 정일진님)

인터넷이라는 공간만 보아도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 오프라인상 위계 질서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임. 메타버스가 우리 인류의 표현의 자유, 또 상상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논의가 됐으면 하는 의견임.

-메타버스 내 규율을 위한 논의 시 검토해야할 점 (이철우님, 전용준님)

게임과 메타버스의 구분은 무엇인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활성화 촉진을 주장하는 쪽이든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든 산업,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고 어떠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논의 필요.

	<p>메타버스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외부, 즉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모순,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노력을 더 투입해서 해결해야 함. 물론 메타버스 내부의 어떤 규제, 이용약관의 엄격함 거기에 어떤 형사적, 민사적 제재 이런 것도 필요.</p> <p>2. 쟁점 토론</p> <p>메타버스 속 성범죄, 명예훼손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바타에 법인격을 부여가능한가 -현실 세계의 규칙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들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공적 규제를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명예훼손의 경우, 아바타가 현실 세계와 자아와 동일시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짐 -메타버스의 특성에 따라 동일시 되지 않는 경우 적용 힘들 가능성 존재 -메타버스 내의 형사적인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경우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영향 고려해야 함. ex) 이용자 위치 정보, 개인 정보 등 - 산업 위축화 가능성 큼 - 메타버스 산업이 커질수록 자율규제가 많은 메타버스와 적은 메타버스가 존재할 것,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란 의견 - 자율 규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체계는 마련 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아바타와 분리가 쉬워지는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동일성이 높아지는 분야도 존재하기 때문 - 법적인 규제 외에도 자율규제로 선행적으로 맞춰나갈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필요함.
<p>워크숍 세션 총평</p>	<p>메타버스 내 인권 논의라는 다소 막연한 주제였으나 꼭 필요한 주제였음. 해당 논의에 참가한 세션 분들이 산업계, 게임계, 법조계, 활동가, 학생, 교수 등 매우 다양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세션 구성이었음.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논의가 매우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p> <p>논의 흐름조차 자연스럽게 성범죄에서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 쟁점이 렵게 넘어갈 수 있는 논의라 더욱 좋았다. 쟁점들이 각각 독립적인 것들이 아닌 연관된 것이라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p> <p>다만, 시간 부족 문제로 마지막 쟁점인 정보격차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지 못 한 아쉬움이 남았다.</p> <p>그럼에도 해당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라는 '유토피아적'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엿볼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거버넌스적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p>